

2023.04.17.(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성환 비서관(조오섭 의원실) 010-7937-2251

전세사기 피해자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월) 15: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정부대책에 실망이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지 2달도 채 안되어, 지난주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피해청년 2명이 스스로의 삶을 거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은 부동산중개인 등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심사는 청년들의 보호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피해 상담건수 중 20·30대 청년층의 피해사례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 처럼 갭투기로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2만 채 이상 증가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전세 사기 조직과 얽힌 악성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 6,000여채에 이르며, '깡통전세' 사기 규모는 2023년 1조8,5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는 이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직면한 사회적 재난을 수습하기는 커녕 '땀질식 미봉책' 만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까지 주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놓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까?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특별법을 통한 '집단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루하루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절실합니다.

자력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임차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구매하고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과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피해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진심을 다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4. 17. (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조오섭 책임의원